

전략노트

Notes on Strategy

2021-11호

신흥 강국, 한국의 전략적 과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신흥 강국, 한국의 전략적 과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2021년 6월, 한국 외교는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 데에 이어 영국 콘월(Cornwall)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 구축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백신 생산과 공급 역할을 부여받아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 글로벌 현안 해결에 필요한 핵심기술 수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록다운 없이 방역을 성공시킨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다.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조건을 갖춘 국가군)으로 불리는 국가들 중 제국주의 시기 식민지를 경험했던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기존 G-7 국가들은 대부분 이전에 제국(empire)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걸어 온 길이 달랐다. 요컨대 한국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신흥 강국인 셈이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처지를 생각하면 실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세기 후반기 세계사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성공 미담(美談)이었다면, 세계적 역할이 부여된 것은 국가 성장 스토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보인다. 이제부터 한국 외교가 화룡점정(畫龍點睛)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지점에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세계의 발전을 주도해야 할 방식의 관점에서다. 한국은 지금까지 캐치업(catch-up) 방식의 발전 모델을 습득하고 성공을 거뒀다. 주요 국가들이 합의했던 국제질서 원리를 수동적으로 수용해 왔다. 18세기 이래 산업화의 방식은 화석연료 사용에 기반한 경제발전 모델이었다. 그리고 마치 피라미드를 닮은 안행형 발전 모델(flying-geese model)은 세계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골격이기도 했다. 이 구조로부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녹색성장, 바이오 산업, 배터리 및 수소 자동차 등에서 새로운 세계자본주의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 지점에 한국이 주도국의 일원으로 서게 되었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한국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이다.

주도국의 반열에 합류한 이상 그 위상을 드러내는 방식, 즉 외교도 가다듬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 2008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이 영화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처연함, 혹은 참담하면서도 결연한 의미를 국제정치에 적용해 보면 ‘타국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불완전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이타적 행동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 사실, 새삼스러울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이치다. 그렇게 보면 국제정치 현장에서 보은(報恩)의 논리는 신화에 가깝다. 국가들끼리 은혜를 주고받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은론이 간혹 맹위를 떨치는 것은 국가 행위를 그렇게 포장하고 인식되기를 바라는 측에 의해 기억이 조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교에서는 가치가 뜻밖에 중요하다. 국가들은 외교적 언사를 통해 가치와 규범을 드러낸다. 목표 속에 담기도 하고 합의에 포함하기도 한다. 국가 행위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익과 가치의 관계, 혹은 그 미묘한 조절 방식에 대해 혼동할 때가 있다. 대부분 국가가 이익을 가치 뒤에 숨겨둔다. 이익을 포장하고 있는 가치들은 꽤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법 보편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야 한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그런 방식이 없으면 국제정치에는 각자도생의 무지막지한 원리들만 판치게 되고, 이익과 이익이 거친 방식으로 부딪혀 갈등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핵심은 이익 추구이지만 뭔가 그럴듯한 가치와 목표를 앞세우고 외교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는 전략적 위선의 기술이기도 하다.

가치로 포장되는 합의들이 소위 국제질서의 관념 요소(ideational elements)를

구성한다. 그 합의된 질서 원칙 때문에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제어된다. 국제정치의 본질은 ‘질서가 잡힌 무정부성’(ordered anarchy)이다. 물론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그것이 자국의 이익과 부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외교 현장에는 ‘투박한’ 이익 추구와 ‘우아한’ 가치 표명 간에 괴리가 존재하기도 한다. 외교를 일컬어 ‘가장 비열한 것들을 (the nastiest things) 가장 멋지게 (the nicest way)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이번에 발표된 카비스베이(Carbis Bay) G-7 정상회담 코뮈니케를 보라. ‘열린 사회’ ‘민주주의’ ‘다자주의’ ‘미래 팬데믹에 대한 대비와 협력 관계 구축’ 등 현시점 어느 누구도 감히 땀지를 걸 수 없는 가치들이 명문화되어 있다. 한국 외교도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방도를 학습해야 한다. 가치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갖춘 외교를 구상하고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세련되고 품격있는 외교로 국격을 높여야 한다.

외교에서 가치를 드러내는 일은 일회용 기술만은 아니다. 국민들의 문화와 인식이 상당 부분 투사되어 표현하는 것이 외교다. 가치와 이익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다. 당당한 외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세계시민 입장이 되어 고민해야 하는 행위 주체는 국민이다. 세계를 주도한다는 자긍심은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문명개화론, 탈아입구(脫亞入歐)론 같은 19세기적 업보(業報)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서양의 일원이 되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은 조바심은 이미 버렸어야 할 구(舊)시대적 행태다. 선진국이라는 용어도 더 이상 적절한 단어가 아닐지 모른다. 전(前)시대 유물과 같은 선진-후진의 수직적 이분법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 중심의 외교를 한다고 가치 뒤에 숨겨둬야 할 이익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가치의 표현과 실천 방식은 유연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천 방식에서 유연성을 잃고 가치만 너무 강직하게 앞세우면 외교가 도덕 교과서처럼 되어 버린다.

가치 중심의 국민적 자긍심이 지나쳐 정부의 대외 조정 기술까지 압박하게 되면 가치-이익 사이에 존재해야 할 공간이 위축될 수 있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서 작동하는 윤리와 도덕성은 동일하지 않다. 아직은 그렇다.

‘타국을 위한 나라는 없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외교 현장에서 가치와 이익 사이에 놓인 오묘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타국을 위한 행동’은 쓰임새가 있는 논변이다.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를 전개할 때, 우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상대 국가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외교다. 이른바 ‘공동이익의 확인’ 과정이다. 순도 100퍼센트 ‘타국을 위한 행동’은 없다. 이익이 공유되면 그 배분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익 공유를 설정하고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설득할 수 있느냐가 외교 기술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럴수록 더 유연하게 외교를 구상하고 행동하는 일이 필요하다. 신흥 강국, 한국에게 주어진 전략적 과제다.